

“전쟁이 이윤을 남기는 장사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

2015년 10월 16-17일
서울여성플라자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목차

국제세미나 소개	2
주최단체 소개	3
프로그램	4
워크숍 목록	6
캠페인 클리닉	7
세미나 사전자료	9
전쟁수해활동: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	11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 라틴아메리카의 시각	15
경찰의 군대화에 맞서는 미국의 저항운동	19
젠더, 방위, 전쟁수해활동	27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31
무기거래와 부패	33
세미나 발제자료	41
경찰의 군대화	43
젠더, 방위, 전쟁수해활동	47
선적을멈춰라 캠페인으로 본 국제연대의 방안	57

국제세미나 소개

전쟁수혜활동에 대한 저항은 전쟁을 가능케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뽑는 일입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기거래이지만, 전쟁수혜활동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조치, 조직, 직접행동, 창의적 캠페인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전쟁수혜자들에 맞서 각자의 방법으로 활동해온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투쟁의 방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저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의 직접행동을 더욱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대중적 캠페인이 로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나 도구가 있지 않을까?”

이번 국제세미나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과 캠페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워크숍 및 캠페인 클리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나선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의 운동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내에서 전쟁수혜활동에 맞선 다양한 저항활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최단체 소개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전쟁은 인류에 반한 범죄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신념 하에서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역거부캠페인, 비폭력프로그램, 무기감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사업, 평

화교육, 통일교육, 평생교육, 평화-통일연구, 국내외 연대활동을 수행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평화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행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화 통일 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할 것입니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40개국 80개 이상의 연맹조직을 갖춘 세계적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인류에 반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전쟁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전쟁의 원

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라는 1921년 창립선언의 정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0월 16일(금)

10:00 – 12:00 [주제 토론 1] 전쟁수해활동이란 무엇인가?

환영사 | 전쟁없는세상

전쟁수해자의 정의와 저항의 필요성 | 조르디 까르보(델라스평화연구소)

채굴산업과 군사주의 | 렉시스 렌든(평화연구소)

경찰의 군대화 | 타라 타비시(전쟁저항자연맹)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주제 토론 1] 전쟁수해활동이란 무엇인가? (계속)

젠더와 군사주의: 전쟁수해활동을 중심으로 | 재스민 갈라스
(미리암대 평화교육센터)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민간 기업 | 로자 모이웬드(PASIFIKA)

14:30 – 16:00 [워크숍 1] 전쟁수해활동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전략적 캠페인 기획 | 새라 월드론, 새라 리더(CAAT)

전쟁수해자 연구조사 방법 | 웬델라 드 브리스(Stop Waffenhandel)

직접행동으로 전쟁수해자에게 저항하라 | 모하나드 "카람" 다라비(국제연대운동)
복희(강정지킴이)

16:00 – 16:30 휴식시간

16:30 – 18:00 [워크숍 2] 전쟁수해활동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창조적으로 저항하라 | 훌라 위츠피나르
수바시 카텔(HDNP)

시위탄압과 군사화 – 폭동진압장비 식별법 | 헬렌 클로즈(오메가연구재단)

법적장치를 통한 전쟁수해활동 저항: 남수단 무기금수조치를 중심으로
| 모세스 존(ONAD)

10월 17일(토)

10:00 – 11:00 [주제 토론 2] 아시아 분쟁과 무기거래

국제무기거래의 동향과 도전 | 앤드류 파인스타인
(『어둠의 세계: 세계 무기거래의 내막』 저자)

동북아시아 지정학과 군비경쟁: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 정육식(평화네트워크)

11:00 – 12:30 [캠페인 클리닉 1]

사전/현장 신청한 캠페인 주제별 그룹 토의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5:30 [캠페인 클리닉 2]

사전/현장 신청한 캠페인 주제별 그룹 토의

15:30 – 16:00 휴식시간

16:00 – 18:00 [주제 토론 3]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저항하라

생각 나누기

선적을멈춰라 캠페인으로 본 국제연대의 방안 | 새라 쉐하비(바레인워치)

전쟁수혜자 저항의 국제적연대 방안 모색 | 전체 토론

폐회사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워크숍 목록

[워크숍 1] 전략적 캠페인 기획

- 진행: 새라 월드론/새라 리더 (Campaign Against Arms Trade, 영국)

[워크숍 2] 전쟁수혜자 연구조사 방법

- 진행: 웬델라 드 브리스(Stop Waffenhandel, 네덜란드)

[워크숍 3] 직접행동으로 전쟁수혜자에게 저항하라

- 진행: 모하나드 "카람" 다라비(국제연대운동, 팔레스타인) / 복희(강정지킴이, 한국)

[워크숍 4] 창조적으로 저항하라

- 진행: 훌랴 위츠피나르(비폭력교육연구센터, 터키) / 수바시 카텔(HDNP, 네팔)

[워크숍 5] 시위의 탄압과 군사화 - 폭동진압장비 식별법

- 진행: 헬렌 클로즈(오메가연구재단, 영국)

[워크숍 6] 법적장치를 통한 전쟁수혜활동 저항: 남수단 무기금수조치를 중심으로

- 진행: 모세스 존 (ONAD, 남수단)

캠페인 클리닉

캠페인 클리닉은 세미나에 참가한 활동가가 진행했던/하고 있는 캠페인의 사례를 나누고 그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는 "클리닉" 형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에 캠페인 클리닉을 신청한 단체/활동가의 경우 자신이 진행했던/하고 있는 캠페인 사례를 간략히 소개 한 후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향후 캠페인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참가자도 캠페인 클리닉에 참여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되고 있는 캠페인을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클리닉 주제

- 독일의 무기거래반대운동
- 네팔의 토지개혁운동
- 이스라엘 여성평화연대 캠페인
- 한국의 군축운동 등

세미나 사전자료

전쟁수혜활동: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

조르디 가르보 루팡게스 / 델라스평화연구소(스페인)

라몬롤대학교, 하우메대학교, 카탈루냐오베르타대학교 분쟁분석/국방경제학 교수. 델라스평화연구소 국방경제학, 평화, 군축 연구위원.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이사.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은 다른 경제부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사유화,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바탕을 둔 군사경제사이클(military economy cycle)에 의해 설명된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히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또한 전쟁수혜활동은 무기/방위산업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다. 전쟁에는 무기와 군대뿐만 아니라 군수, 운송수단, 식량, 청소, 번역 서비스, 민간보안 등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탐욕을 위한 전쟁은 권력만이 아니라 석유, 콜탄, 다이아몬드, 기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의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전쟁수혜활동의 기본구조: 군사경제사이클

군사경제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국방경제학의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무기사이클(arms cycle)이라 불리기도 한다. 둘 다 무기에 대한 ‘필요’를 공적 군사비로 충족하겠다는 결정에서 무기의 최종 사용에 이르는 무기생산 사이클을 뜻한다.

이러한 사이클이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은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위협을 지목하고 무기와 군대의 필요성, 나아가 높은 수준의 군사화와 무장을 정당화하는 주장과 담론이다. 따라서 방위, 안보, 분쟁, 평화 관련 연구기관(흔히 ‘싱크탱크’)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정부의 안보독트린은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무장과 군사화를 진행시킨다.

국가정책은 싱크탱크에 의해 간헐적, 지속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군대 유지의 필요성은 국방에 관한 문화, 군사화된 교육, 군사 및 무기에 관한 역사와 전통, 무기에 대한 관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운동도 무장과 군사화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군사경제사이클 혹은 무기사이클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담론과 독트린, 주장은 국방에 필요한 일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군사비는 신무기 연구개발(군사 R&D)과 방위산업의 생산에도 사용되며, 그 비용의 일부는 공적 예산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군사비 지출, 군사 R&D, 군수산업, 무기구매를 다룰 때는 국방부만이 아니라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에도 주목해야 한다. 군사경제사이클의 전체적 비용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군사경제사이클의 다른 구성요소로는 국제 무기거래, 무기거래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금융기관, 나아가 군수산업의 작동과 무기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군수업체 주주가 있다.

전쟁수혜활동에서 군산복합체가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용어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1961년 퇴임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이 표현으로 백악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들을 지칭했다. 군산복합체는 다양한 인물과 기업, 정치단체로 구성된다. 무기구매를 비롯한 군사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국방부의 군 고위급 인사들도 포함된다.

군산복합체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내무부, 무역 주무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

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방과 관련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선출직, 군 고위직, 군수업체 임원 사이에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phenomenon}가 이루어진다(한 명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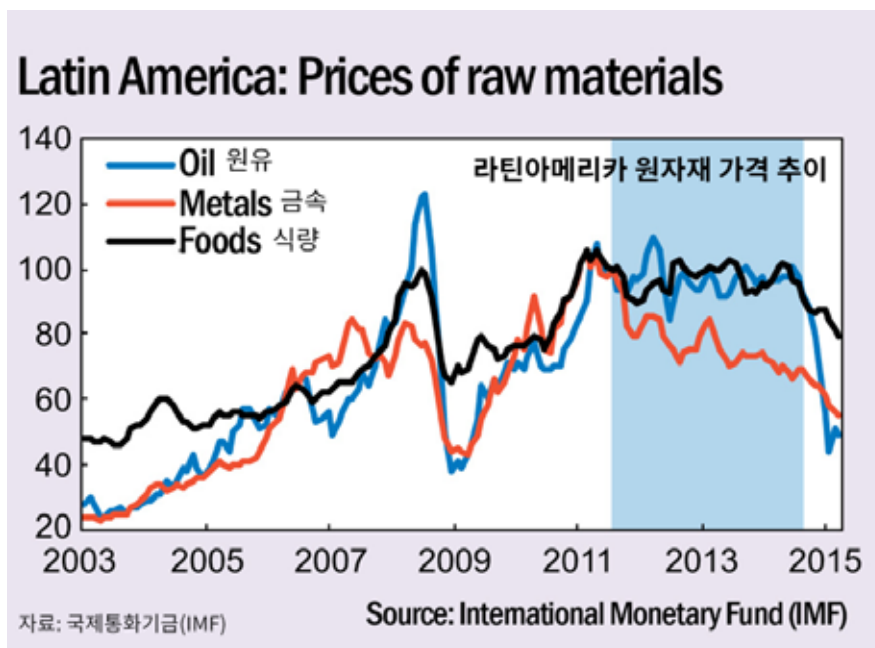
군사경제사이클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조성하는 국가적, 경제적 여건은 ‘국방경제’가 ‘항구적 전쟁경제’로 전환될 때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이상적이다. 군사경제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 무기산업, 무기수출, 무기금융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경제사이클의 적극적 주체로 활동하는 기업 및 개인은 전쟁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군산복합체의 구성원이다.

*번역: 영어 국제회의통역사 이세현(sehyon.le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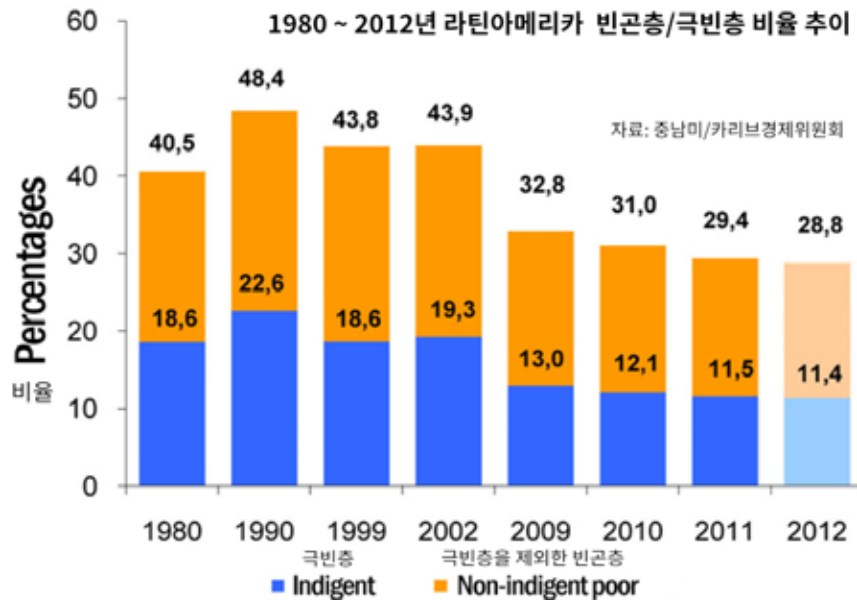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 라틴아메리카의 시각

렉시스 렌든 / 평화연구소(베네수엘라)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3~2013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지표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다. 소위 ‘원자재 가격 호황’ 덕분이었다. 원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적 경제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20대 기업 중 13개는 원유, 가스, 광업, 철강부문에 속한다. 외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각국은 역내 빈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2012년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는 역내 빈곤율이 28.8퍼센트로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Latin America: Evolution of poverty and indigence, 1980-2012 (CEPAL)



그런데 국가경제의 수입 증가는 극심한 빈곤의 감소만이 아니라 급격한 무기구매 증가와 라틴아메리카 각국 군대의 현대화로도 이어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를 기반으로 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00~2010년 라틴아메리카의 누적 군사비 지출은 총 136억 2400만 달러로, 150퍼센트 증가했다. 세계 전체의 군사비 지출은 2012년 현재 170억 달러로, 세계총생산의 2.5퍼센트를 차지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군사비 지출은 전체 GDP의 4퍼센트로, 세계 평균을 상회했다.

채굴산업 활성화로 1차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는 현상, 그리고 다양한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이 들어선 각국에서 군사화가 강화되는 현상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의 언론인이자 연구자 라울 지베치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의 군사화 없이 진행되는 채굴주의extractivism란 있을 수 없다. 군사화가 그러한 경향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천채굴이든 대규모 광산개발이든 언제나 군사화를 동반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환경의 군사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군사화'를 단지 어떤 국가에서 군대의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의 가치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채굴주의의 10년'이라 할 만한 라틴아메리카의 2003~2013년은 군사화도 크게 진전된 시기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군대의 운영과 무기구매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평화적 시위와 이를 이끄는 대중적 지도자 및 선주민 공동체에 대한 범죄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각국은 법 개정과 신규입법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이 역사적으로 취해온 파업, 거리봉쇄,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나 후드티 착용 등의 투쟁전략을 범죄로 규정했다.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각국 정부는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태도, 다시 말해 뉴욕 쌍둥이빌딩 붕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주의적, 선악 이분법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테러방지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법은 국가와 민족의 우월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선제적'으로 내부/외부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현상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주민/농민 공동체는 군사화된 지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광산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채굴주의와 군사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을 촉발했다. 페루의 라틴아메리카환경분쟁관측소는 2012년 현재 2개국 이상에 걸친 분쟁 5건을 포함해 총 184건의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253개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선주민/농민 공동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땅에 관한 요구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토지의 구획화와 선주민 공동체에 대한 반환, 채굴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 광산개발 및 채굴로 발생하는 토양/수질/대기오염 대책 수립 등이다. 현재 선주민/농민 지도자와 인권활동가 상당수는 시위 참여를 이유로 구속된 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법부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군대가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반군사주의자에게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역내 신자유주의 쇠퇴 이후 헤게모니적 발전모델로 자리잡은 채굴주의와 국가기구/지역의 군사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가시화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아직 이러한 연결고리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활동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번째 과제는 군사주의와 다른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를 추구하는 포괄적 반군사주의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간 이념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와 우파는 군대에 대한 숭배, '다름'을 위협이자 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국가가 독점하는 물리력과 무기 사용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군사주의 운동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촉발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들이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했다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 ‘사회운동’이라는 말이 게릴라 투쟁이나 체 게바라, 시몬 볼리바르 같은 군사 지도자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각국은 범죄화를 통해 시위 참가자의 민주적, 평화적 수단 사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폭력적 수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이를 ‘폭력적’ 시위대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범죄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며, 운동을 고립, 분열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땅, 환경, 참여와 인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비폭력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반군사주의 운동의 가능성이자 의무다.

*번역: 영어 국제회의통역사 이세현(sehyon.lee@gmail.com)

경찰의 군대화에 맞서는 미국의 저항운동

타라 타바시 / 전쟁저항자연맹 전국 조직담당자(미국)

어반실드, 경찰의 군대화 사업에 나서다

세계 최대의 경찰특공대 훈련 및 전쟁무기 박람회 어반실드(Urban Shield)가 뉴욕시 9/11 참사 14주기를 맞는 9월 1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베이에어리어(Bay Area)에서 개최되었다. 베이에어리어 알라메다카운티에서 2007년부터 개최되는 어반실드에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법집행기관 및 무기제조업체 수백 개가 참여해 군대급 무기를 거래하고 전술을 교류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베이에어리어 곳곳에서는 훈련이 진행된다. 경찰봉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경찰을 특공대처럼 중무장한 ‘로보캡’으로 변신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 쇼핑’으로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경찰의 군대화 박람회’는 어반실드 외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물론 미국 경찰은 2007년 어반실드가 처음 개최되기 훨씬 전부터 잔혹행위를 저질러 왔다. 1960년대 중반~1980년대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첨단 군사장비 및 기술을 경찰에 이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주의, 특히 경찰의 군대화가 긴급상황 대비와 공공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중앙집중화/체계화되는 현상은 ‘테러와의 전쟁’ 및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찰의 군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두드러진다. 어반실드는 국가폭력의 군사주의가 미국의 지역사회에 깊이 침투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허리케인이 테이저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2단계를 발령한다. 지금 즉시 탱크를 보내라!”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어반실드. Since 2007>¹

경찰국,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응급의료기관은 어반실드 기간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무인기와 장갑차부터 DNA 판독기까지 전 세계 무기제조업체의 최신 제품과 감시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에 참석한다. 어반실드는 “인구밀도와 위험도가 모두 높은 도시지역”을 위한 “긴급상황 대비훈련”²이라고 홍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상황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략한다. 하지만 어반실드는 미 국토안보부의 후원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훈련 시나리오, 워크숍의 주제, 박람회에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모두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어반실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군사주의를 홍보하는 국제 대테러 행사다.

언론은 매년 항공무기와 탱크 등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의 도시 - 옹건이)에서 판매되는 어반실드의 첨단제품을 주로 다룬다. 2015년에는 위 사진과 같이 “Black Rifles Matter”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경찰의 흑인 총격살해에 항의하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한 조롱 - 옹건이). 세계적/국가적

1 에단 하이트너(Ethan Heitner)가 전쟁저항자연맹에 제공한 만화.

2 www.urbanshield.org



차원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 상태라 할 수 있는 군사주의는 무기부터 감시기술까지 명백한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버려진, 위험한, “급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유머, ‘게임’ 문화, 폭력의 일상화를 통해 확산된다. 이로 인해 두려움, 백인 우월주의, 이성애중심 가부장제, 전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화된 사고방식은 경찰국 등의 기관에 침투하고, 미국 전역에서 경찰폭력의 심각성을 배가시킨다.

어반실드가 베이에어리어의 지역사회는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경찰당국이 소재한 도시나 국가에 군사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긴급상황 대응팀이나 소방당국이 흑인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동반하는 군사화된 경찰특공대 훈련에 참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어반실드의 훈련 시나리오에는 “자생적 국내 테러리스트”와 정치적 시위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어반실드와 베이에어리어는 UC 버클리에서 대회 형식의 공개훈련을 실시했는데,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하드 관련 글을 인터넷에서 본 무슬림이 유대인을 인질로 잡고”, 화학무기를 사용해 “유대인에게 위협을 가해 무슬림에게 저지른 일에 보복하려고 하는”³상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일상화된 ‘무슬림 테러리스트’라는 관념을 강화한다. 또한 법집행당국이 일상적으로 아랍인 및 무슬림을 대할 때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파트헤이트 정책 지원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수준의 대응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념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무기와 전술은 미국 내에서 이미 ‘적’으로 상정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흑인, 선주민, 멕시코계, 무슬림, 유색인종, 빈곤층, 특히 홈리스는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연 5만건), 비사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 경찰의 잔혹행위, 인종기반 프로파일링, 의심행동보고정책, 퓨전센터^{Fusion Center}(국토안보부 산하 대테러 정보수집기구 - 윙킨이), 감옥산업복합체^{prison-industrial complex}의 급속한 확장 등으로 나타나는 경찰의 군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3 <http://english.al-akhbar.com/node/21498>

어반실드는 알라메다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주관하지만 도시지역안보이니셔티브 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덕분에 개최되는 행사다. UASI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각종 기관에 총 6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국토안보부는 UASI가 “위협 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39개를 지원해 “테러 행위에 대한 예방, 보호, 완화, 대응, 회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유지하는”⁴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사실 미국 전역에서 국가의 탄압을 강화/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UASI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만 예산이 3천만 달러 가까이 증가했고, 2007년 이후 어반실드는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물론 텍사스주 중부(포트워스, 댈러스, 오스틴)에서도 개최되었다. UASI의 최대 수혜자는 2014년에만 1억 78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뉴욕 대도시권(뉴욕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권역 - 윙킨이)이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워싱턴 D.C., 베이에어리어, 휴스턴이 매년 각각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으며 뒤를 잇는다. UASI 지원 대상에는 어반실드 같은 박람회뿐만 아니라 시정부의 전쟁무기 구매사업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감시카메라, 노스다코타주 파고와 뉴햄프셔주 킨의 베어캣 탱크^{BearCat Tank}, 롱비치의 장갑차 구매 등이다.

전 세계의 경찰당국, 대테러부대, 국경경비대는 어반실드에 모여 국가의 탄압과 군중통제를 위한 전술과 무기기술을 교류한다. 지금까지 어반실드에 참여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그리스, 싱가포르, 브라질, 요르단, 카타르, UAE, 캐나다 등이다. 올해에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경찰당국 등의 국내기관과 한국, 요르단, 우루과이, 콜롬비아, 태국, 중국 등 외국기관이 참여했다. 이러한 행사의 주최측은 흔히 다음에는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한다. 어반실드는 사파리랜드^{Safariland} 등을 ‘플래티넘 참여업체’로 섭외하며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파리랜드는 브라질, 바레인, 캐나다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 최루탄과 탄압기술을 수출하는 주요 무기제조업체다. 어반실드의 폐막 다음날에는 런던에서 세계 최대의 무기박람회 국제방위안보장비전^{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이 개막한다. DSEi에는 전함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세계 3위의 무기제조업체 BAE 시스템즈 등 어반실드에 참여했던 기업 상당수가 그대로 참여한다.⁵

4 <http://www.economist.com/news/united-states/21599349-americas-police-have-become-too-militarised-cops-or-soldiers>

5 <https://www.caat.org.uk/issues/arms-fairs/dsei/exhibitors>

경찰과 군대는 미래의 해답이 아니다!

미국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국내외의 경찰 탄압과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은 계급과 인종에 따라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의 잔혹행위로 나타나는 국내 탄압에 저항하는 사회운동과 시위의 주도 집단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노동자 계급, 흑인 빈곤층, 유색인종 등이며,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거리경제 혹은 지하경제 종사자, 성적소수자 등이다. 작년에는 퍼거슨과 볼티모어의 흑인 시위와 전국적으로 펼쳐진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운동은 경찰의 지역사회 주민 살해로 촉발되었지만 실업과 자원부족 등 구조적 억압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제적 탄압에 맞선 반군사주의 운동의 구성원은 백인과 중산층이 다소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맞선 국제주의적 연대와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전운동은 한때 대중적 동력을 얻었지만 지금은 세력이 약화된 주변부 운동이 되었고, 다른 사회운동에서 고립된 백인 노인층이 구성원의 다수를 이룬다.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은 92년 전에 미국에서 결성된 단체로, 반전/반군사주의 직접행동과 조직화 위주로 활동해 왔다. 다양한 운동과 집단을 가로지르는 조직화를 정치적 전략으로 채택하며, 경찰과 군수산업이 이론과 실제 모두에 있어 협력과 전술교류를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운동에 걸친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찰폭력 반대운동 및 반전운동의 분열과 주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의 첫 사례는 경찰 최루탄의 표적이 되는 활동가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이뤄 최루탄 제조업체에 맞선 공동행동을 벌이는 최루탄저지운동(Facing Tear Gas Campaign)이었다. 이후 UASI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보건과 안보의 탈군사화(Demilitarize Health and Security)’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미 국토안보부와 동일한 약자 ‘DHS’를 사용한 일종의 언어유희). DHS 운동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경찰군대화저지연대(STOMP Coalition, 뉴욕시의 브래튼부대해체운동(Dismantle Bratton’s Army(윌리엄 브래튼 뉴욕시경찰국장이 창설한 ‘대테러’ 특수부대 반대운동 - 옴긴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어반실드저지연대(Stop Urban Shield Coalition 등 세 지역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반실드저지연대는 흑인 및 중남미계 지역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풀뿌리 차원에서 힘을 모은 특별한 사례다. 경찰폭력과 군사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전국조직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포괄한다. 연대의 목표는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 탄압 전술의 시험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⁶이다. 2014년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진 쿠안Jean Quan 시장으로부터 ‘오클랜드시는 더 이상 어반실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얻어냈다.⁷ 기분 좋은 성과였지만 얼마 후 어반실드는 오클랜드 근교의 플레즌튼Pleasanton으로 장소를 살짝 옮겼고, 베이에어리어의 알라메다카운티에서도 계속 개최되었다. 올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미국의 시 정부와 카운티정부가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협력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에 따라 베이에어리어 주민 조직화에 나섰고, 알라메다카운티에 어반실드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



<지역사회를 군사화하는 어반실드. Since 2007>⁸

6 <https://www.warresisters.org/stop-urban-shield-2015>

7 <http://wagingnonviolence.org/2014/09/oakland-mayor-announces-urban-shield-will-returning-oakland>

8 에단 하이트너가 전쟁저항자연맹에 제공한 만화.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우선 알라메다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전쟁으로 이윤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항의전화의 날’을 조직했다. 게릴라식 도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 알라메다카운티 보안관실 건물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연대는 이처럼 다양한 전술을 사용해 경찰의 군대화가 지역사회, 특히 유색인종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어반실드 중단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에는 약 1만 명이 참여했고, 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어반실드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말라는 전화 수백 통이 빗발쳤다. 어반실드는 다양한 기관의 긴급상황 대비태세 강화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흑인, 아랍계, 무슬림, 이주민, 빈곤층에 대한 군사화된 긴급상황의 일상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반실드저지연대의 활동은 단지 경찰의 군대화가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로 한정되지 않는다. 연대는 유색인종이 주도하는 강력한 연합조직이며, 경찰과 군대가 통치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인종, 종교, 계급, 교파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고, 도시를 연결해 군사화에 저항하는 전국적 운동을 펼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특별한 사례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의 산물인 어반실드를 미국에서 몰아내고 경찰과 국토안보부의 비대한 권한을 박탈한다면 미국이라는 전쟁기계는 핵심을 탈군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미국의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진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방위, 전쟁수혜활동

재스민 나리오-갈라스 /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사무총장(필리핀)

필리핀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사무총장, 1325호 여성행동 전국 코디네이터, 팩스크리스티-필리피나스 대표, 아시아 여성평화형성자 프로그램 멤버, 세계여성평화활동가네트워크 운영위원.

IHS 세계방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방위무역 규모는 2013년 568억 달러에서 2014년 644억 달러로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미국이었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뒤를 이었다. 세계 10대 수입국 중 7개국은 인도, 중국, 대만,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였다. 5대 수출업체로는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Raytheon, 에어버스그룹, UAC가 이름을 올렸다. 1~3위는 미국 기업이고, 4위와 5위는 프랑스와 러시아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다.¹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 7,7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가 포함되었다.²

1 IHS Newsroom. Saudi Arabia Replaces India as Largest Defence Market for US, IHS Study Says. (March 7, 2015). Retrieved September 19, 2015, from <http://press.ihs.com/press-release/aerospace-defense-terrorism/saudi-arabia-replaces-india-largest-defence-market-us-ihs->

2 Sam Perlo-Freeman, Aude Fleurant, Pieter D. Wezeman and Siemon 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4. Retrieved September 19, 2015 from http://books.sipri.org/product_info?c_product_id=496

각국이 방위체계의 몸집을 키워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사이, 엄청난 방위/군사비 지출과 전쟁으로 이윤을 얻는 이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규모 방위/군사비 지출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 소수에게만 이윤을 제공하는 방위무역은 무력분쟁의 발생, 격화, 지속에 기여한다. IISS는 2014년 현재 진행 중인 무력분쟁이 42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³

전통적 방위 개념은 위험, 위협, 혹은 공격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방위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 각국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는 무기보유량을 늘리고 반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방위가 폭력, 군사주의와 다름없는 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방위 개념은 젠더화된 영향을 낳는다. 방위는 남성의 영역이 되었고,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젠더화된 힘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념은 강간이 전술로 사용되는 무력분쟁의 격화, 지속, 악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난민, 국내 이재민, 무국적 인구의 절반 가량은 언제나 성인 여성과 여아”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설명과 같이 이재민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천막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여성, 특히 임신, 월경, 수유중인 여성은 보건관련 서비스 부족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성희롱 발생 건수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를 군사화하는 방위 개념은 여성을 더욱 위협하게 하고, 전쟁수혜활동과 젠더기반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 심지어 여성이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무기 판매에 기여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처럼 남성적이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방위 개념은 지나친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고, 각국 정부가 보건, 기초생활보장, 교육 등의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성평등을 달성할 가능성을 한층 줄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전쟁으로 이윤을 얻는 자들이 손쉽게 부를 쌓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성 평화활동가들은 인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3 IISS. Armed Conflict Survey 2015 Press Statement. (May 19, 2015). Retrieved September 19, 2015 from <https://www.iiss.org/en/about%20us/press%20room/press%20releases/press%20releases/archive/2015-4fe9/may-6219/armed-conflict-survey-2015-press-statement-a0be>

서비스가 아니라 군산복합체에 자원을 사용하는 지배적 안보패러다임에 언제나 의문을 제기해 왔다.

여성들은 다양한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 폭력의 미화와 제도화를 반대하는 운동, 성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체결과 국가 차원의 입법운동이 그런 사례다.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을 통해 전쟁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 국내적 갈등은 비폭력적 해법으로 풀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무기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촉발되고, 우리 자신은 물론 가까운 이들과 지역사회가 더욱 위험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군비축소 및 통제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무력분쟁이 빈곤과 불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비 지출 삭감과 인간 발전을 위한 자원 사용을 주장하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분쟁의 예방과 중재는 물론 근본 원인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이 군사주의 속에서 주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며, 군사주의에 맞서는 것이 남성 자신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펼치는 것은 무기가 안보를 지킨다는 전쟁수혜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안보란 갈등을 건설적,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에 달린 문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평화와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로자 모이웬드 / PASIFIKA(웨스트파푸아)

웨스트파푸아는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1963년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점령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 덕분이었고, 미국의 동맹국인 네덜란드, 영국, 호주의 지지를 받았다. 유엔은 웨스트파푸아인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부정하고 인도네시아에 의한 점령을 지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점령 초기 몇 년간 웨스트파푸아인의 저항은 군사작전과 공군의 폭격으로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웨스트파푸아의 통치권이 웨스트파푸아인의 동의 없이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을 유엔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2년 전,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웨스트파푸아에 대규모 금광과 구리광산을 건설했다. 프리포트^{Freeport} 광산은 처음부터 국가자산이자 안보사업으로 지정되어 인도네시아군의 대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이처럼 외국군에 의한 영토점령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식민주의는 웨스트파푸아에서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굴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본투자, 인도네시아인의 대대적 이주, 웨스트파푸아 선주민의 강제퇴거를 동반하는 신식민주의에 의해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주정책은 몇 년간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빈곤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포장했지만 웨스트파푸아를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빈곤을 창출하는 군사화된 개발이었던 것이다.

파푸아뉴기니 국경지대의 파푸아 선주민들은 북으로 아르소, 남으로 소타까지 대규모 벌목에 이은 팜유 농장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북부의 키롬 지역에서는 파푸아 선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감소했다. 국경에는 군부대가 주둔했고, 인도네시아군은 오지 마을까지 포함해 웨스트파푸아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식민주의 점령과 신식민주의 투자 및 이주는 다양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개발촉진단^{UP4B}, 인도네시아경제개발촉진확장종합계획^{MP3EI} 등이다. 웨스트파푸아 남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메라우케 식품에너지통합지구^{MIFEE}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MIFEE 사업은 120만 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차지할 예정으로, 태고적부터 살아온 웨스트파푸아 선주민 수만 명이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의 군 관계자들과 연계되어 있다.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은 상대가 네덜란드이든 인도네시아이든 점령이 시작된 순간부터 계속되었다. 선주민의 땅을 지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위한 폭넓은 저항운동의 기반이다. 1998년부터 이러한 저항은 대부분 비폭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MIFEE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웨스트파푸아 남부에서는 말린드아님족^{Malind Anim}이 선주민의 땅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의 사무소를 점거했다. 입주기업을 위한 차량진입로를 텃밭으로 만들어 통행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저항의 물줄기는 이제 거대한 정치적 반대의 사나운 강물로 변하고 있다.

저항의 성장은 더욱 폭넓은 정치운동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3대 저항운동 조직이 모여 웨스트파푸아해방운동연합^{United Coalition for the Liberation of West Papua}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었다. 웨스트파푸아해방운동연합은 첫 번째 목표로 유엔의 인정을 받는 주요 소지역^{sub-region} 단체 멜라네시아선봉그룹^{Melanesian Spearhead Group}의 회원단체 가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500명 이상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1명은 살해당했다. 많은 비중을 두었던 서명운동에는 5만 5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등 멜라네시아 국가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정부가 웨스트파푸아인들의 목소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 결과 웨스트파푸아해방운동연합은 멜라네시아선봉그룹의 참관국^{observer} 지위를 얻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치협상을 벌일 안정적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아직 웨스트파푸아에서 식민주의, 개발, 군사주의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웨스트파푸아인들은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자유, 존엄,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번역: 영어 국제회의통역사 이세현(sehyon.lee@gmail.com)

무기거래와 부패

앤드류 파인스타인 / 『어둠의 세계: 세계 무기거래의 내막』 저자(남아공, 영국)

앤드류 파인스타인은 『어둠의 세계: 세계 무기거래의 내막』The Shadow World: Inside the Global Arms Trade』을 썼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6년 초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소속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부패감시기구 Corruption Watch UK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제 무기거래는 수십억 달러의 이윤과 함께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사업이다.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가장 파괴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무기거래는 정부 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전쟁을 외교보다 우선순위로 삼게 만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든다. 분쟁과 탄압을 지속,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2014년 현재 1조 7,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인구 1인당 250달러 이상을 군사비로 쓰는 셈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0.4퍼센트 줄었고, 세계 GDP의 2.3퍼센트에 해당한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2014년 군사비 지출은 전년대비 5퍼센트 증가했고, 2005년과 비교하면 62퍼센트 증가해 4,39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전년 대비 2.6퍼센트 증가했다. 일본은 9위에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7~2012년 사이에도 군사비 지출은 24퍼센트 증가했다. 그리스는 독일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패한 계약 두 건을 체결한 나머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형무기거래의 규모는 연간 최소 85억 달러에 달한다. 그 파괴적 영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세계의 폭력에 의한 사망 중 매년 52만 6000건은 전쟁과 살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소형무기가 사용된다.

국제 무기거래는 국방의 중요한 요소이자 외교정책의 수단이고, 과장된 경우가 많지만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 하지만 무기거래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세계에 또 다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분쟁과 탄압의 유발, 격화, 지속,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다.

무기거래는 공식적 무역부터 내가 ‘어둠의 세계^{Shadow World}’라고 부르는 그레이마켓, 블랙마켓까지 법적, 윤리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이루어진다.

현실에서 이러한 영역간의 경계는 흐릿하다. 공식적 무역과 암거래는 서로 의존하며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뇌물과 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인이나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기거래에서 불법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규모 방위산업체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거래업체 상당수는 그레이마켓과 블랙마켓에서도 활동한다.

조 로버^{Joe Roeber}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40퍼센트 가량은 무기거래에서 발생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부패에 관한 5년간의 연구 결과 방위산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무기거래가 부패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버는 무기거래가 태생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을 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구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계약 금액은 엄청나게 큰데, 의사결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비밀주의의 장막 뒤에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부패와 그 은폐로 인해 무기수출국과 수입국에서는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불안정한 국가의 상황이 악화되며,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심지어 무기 구입이 강화한다는 국가안보가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무기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회전문 인사’다. 회전문 인사란 정부, 정치권, 군, 정보기관, 방위산업체의 주요 직책을 같은 사람이 돌아가며 맡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외교보다 전쟁을 선호하게 되고,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에서도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위산업체, 무기거래업체, 정당의 커넥션이다. 무기거래가 정치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안보 엘리트’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적 평행우주’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집계에 따르면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위반행위 502건 중 법적조치가 취해진 것은 2건이며, 유죄로 인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방위산업의 실태를 직접 목격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거래로 인해 갓 태어난 민주주의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내가 소속된 아프리카민족회의를 비롯해 거물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총 3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

아시아는 국제 무기거래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큰 고통을 겪어왔다. 무기를 생산하는 북반구 국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 수요를 창출하는 수많은 전쟁이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국내적으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겪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자리를 잡아 수입국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무기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무기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의 지출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다. 미국의 무기사업은 방위산업체, 로비스트, 의회, 백악관, 국방부가 서로 뒤를 봐주는 순환고리를 바탕으로 한다(2010년 은퇴한 정부 고위급 관료의 84퍼센트가 자신이 재직하면서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의 고위급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합법적 뇌물공여 체계는 끝없는 전쟁과 쿠데타를 유발하고 수입국의 국가기구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엄청난 낭비라는 피해를 낳는다. F-35 전투기가 대표적 사례다. F-35 구매를 위해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하지만, F-35는 미국이 현재 개입한 분쟁은 물론 앞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도 전혀 쓸모가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정부에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가해진 사건이 있다. 한국은 입찰에 참여한 제품 중 상대적으로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 전투기 구매에 45억 달러를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다양한 군사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무기제조업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독일의 페로스탈^{Ferrostaal}은 16개국에 총 11억 유로 이상의 뇌물을 뿌렸다. 그 중 4,200만 유로는 뇌물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위급 정치인들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한국의 중개업자에게 돌아갔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2년 1억 4,400만 달러에서 36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1퍼센트 성장했다.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와 군사주의적 사고의 고착에 기여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몇 개만 언급하자면, 분쟁으로 목숨을 잃는 이라크,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전쟁중인 터키, 인권침해로 잘 알려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다.

무기판매는 판매된 무기가 다시 판매자를 향하는 ‘역류^{blowback}’ 현상을 낳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무기 수요의 끝없는 증가와 분쟁의 확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평화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무기제조업체의 이윤은 점점 늘어난다.

무기거래 규제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인해 놀랄 만큼 느슨한 수준이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보이콧 운동과 시위, 직접행동을 통해 최대의 무기거래업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변할 수 없다고 체념한다면 무기거래는 계속해서 세계의 빈곤, 부패, 위험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영어 국제회의통역사 이세현(sehyon.lee@gmail.com)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정육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한국)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언론비평위원. 저서로는 『김동대 정육식의 진짜안보』, 『21세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동맹의 덧』,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등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는 남북한과 일본, 몽골이 있고,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과 러시아 영토의 일부분도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실상의 국가’인 대만도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역외 국가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동북아의 지정학에서 한반도는 각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구한말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과 정전체제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은 대단히 강해졌다. 일본과 미국 등 해양세력이 팽창하면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해양세력의 확장을 저지할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반면 대륙세력이 팽창하면 미국과 일본 내에선 한반도가 일본을 향해 뻗친 대륙의 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곤 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정전은 이러한 동북아 지정학의 비극적인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민감성은 군사화를 유발하고 군사화는 또 다시 지정학적 위험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군사화는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각국의 군비증강이다. 6자회담 참가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의 군사비 합계는 전세계 군사비의 70%에 육박한다. 또 하나는 동맹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개별적으로 강화하면서 한일간에도 군사관계를 만들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제주해군기지이다. 올해 말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해군은 이를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으로 삼겠다고 한다. 미국은 미 해군의 기항지로 쓰겠다고 한다. 국가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국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상당수 국민들,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의 인사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군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군기지가 완공되어 가동되면 제주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되는 중국에겐 ‘전략적 위협’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주 해역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심장부에 해당하는 서해의 관문에 해당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와도 근접해 있다.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국이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견제할 수 있는 중간 기지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 경쟁의 충돌 가능성을 품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이 중국 연안으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쿠릴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제1 도련선(島鍊線)을 방어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핵심적인 국방전략인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A2/AD)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이선 안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 세력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 도련선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신의 해군력 60%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에 미군 기지와 기항지를 확대하려고 한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부활시켜 미 해군 기지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 교토 남부에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노코 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 또한 괌을 전략기지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가 이러한 미중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선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의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에 이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된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 David J. Suchyta는 2013년에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¹

“제주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부 대륙붕의 약 70%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동해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서치타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고, 반대로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미국이 제주기지를 사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역자 주), 제주기지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하고 그 결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이 깨지고 말았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6월 초까지 주한 미 해군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8월 5일 이임식 자리에서 “미 해군은 한국의 남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한국에겐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러나 미 해군 장교인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은 이러한 비판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지가 건설되면 미국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정부와 군당국은 이 역시 일축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주한 미 해군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은 공개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뒤늦게 정당화된 것 같아 씁쓸하다.

1 David J. Suchyta,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March 2013.

세미나 발제자료

주제 토론 1 전쟁수혜활동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군대화

타라 타바시 / 전쟁저항자연맹 전국 조직담당자(미국)

경찰의 군대화

전쟁저항자연맹

타라 타바시



경찰이란?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경찰은 누구를 다치게 하는가?



경찰의 군대화=

레이건 급습 로보캅

Reagan, Raids, & Robocops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군사지역이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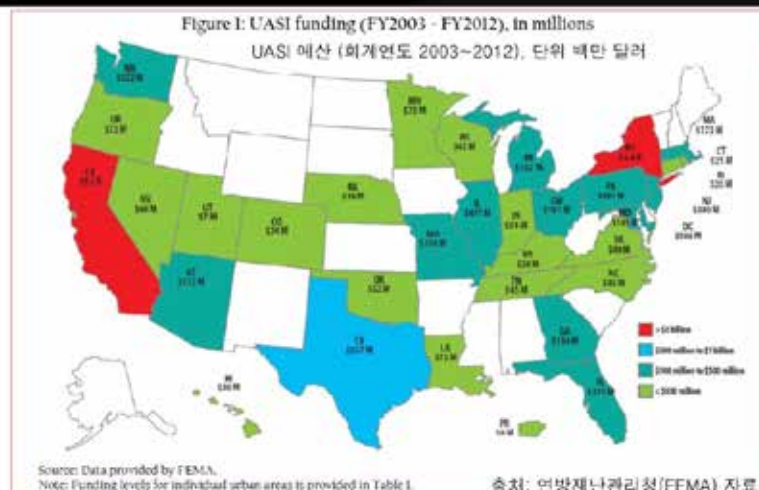
1887	'민병대 소집법' 제정으로 군의 법집행을 금지	
1981	레이건 정부, '민간 법집행 군합력법' 제정	지역·주·연방경찰에 군 장비·정보·훈련 제공
1986	레이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1988	'에드워드 번 추모 주 지역 법집행 지원 교부금 제도' 도입	지역경찰이 마약사범 체포를 우선시하도록 연방 교부금 지급







도심지안보계획(UASI)



어반실드저지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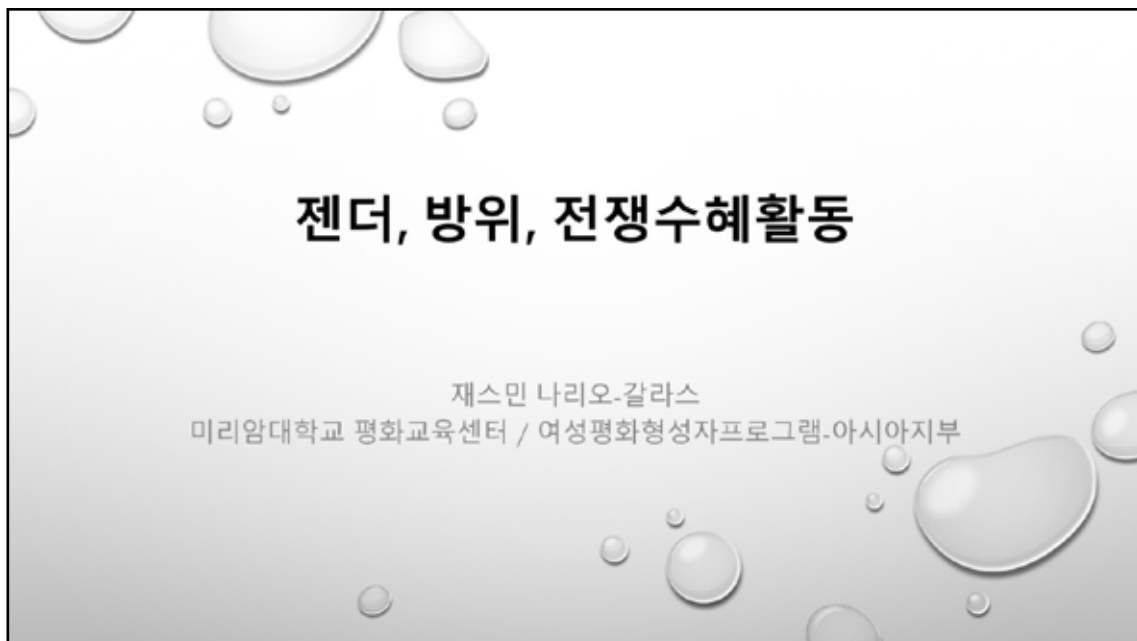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지역의 어반실드에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의 군사화에 반대한다!”

주제 토론 1 **전쟁수혜활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방위, 전쟁수혜활동

재스민 나리오-갈라스 /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사무총장(필리핀)

필리핀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사무총장, 1325호 여성행동 전국 코디네이터, 팩스크리스티-필리피나스 대표, 아시아 여성평화형성자 프로그램 멤버, 세계여성평화활동가네트워크 운영위원.



2014년 세계 무기거래 동향

- 전세계 무기거래액: 644억 달러.
- 세계 5대 수출국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 세계 10대 수입국 중 7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음: 인도, 중국, 대만,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 5대 수출기업: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에어버스그룹, UAC. 첫 세 곳은 미국 기업이고 나머지 두 기업은 각각 프랑스와 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음.

SOURCE: IHS GLOBAL DEFENCE TRADE REPORT

2014년 세계 군비 지출

- 2014년 세계 군비 지출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가 최대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에 포함되어 미화 1조 7760억 달러에 달함

SOURCE: SIPRI

방위, 군대, 전쟁에 막대한 지출=행복한 전쟁수혜자들



<http://independentfilmnewsandmedia.com/video-war-profiteers-steal-billions/>

전쟁수혜자들이 방위를 선전하는 방식

- 항상 위험, 위협 혹은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
-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무기의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안이다.
- 그러나 무기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무력 분쟁을 발생시키고, 부채질하고, 지속시킴. 2014년의 경우 42곳의 무력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180,000명에 달함.
우리는 지금 파괴의 악순환에 빠져있음!



IMAGE SOURCE: [HTTP://BLOG.CARTOONMOVEMENT.COM/2012/12/NEW-SHIRT-DESIGN-VICIOUS-CIRCLE](http://BLOG.CARTOONMOVEMENT.COM/2012/12/NEW-SHIRT-DESIGN-VICIOUS-CIRCLE)

기존 방위 개념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시사점

- 방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젠더화된 힘을 유지해주는 남성의 영역이 되었음.
- 이러한 방위 개념은 무력분쟁(전쟁의 전술로써 강간이 활용되는)을 조장하고, 유지시키고, 더욱 악화시켰음.
- 이같은 개념은 “여성 및 소녀가 난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유엔난민기구) 이주 상황을 발생시킴. 대피소에서 캠프생활을 하게 되는 여성은 보건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임신, 생리 혹은 수유 중인 이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 대피소 내 성희롱 신고도 높게 나타남.

이 같은 방위 개념은 무기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게 되었음.



Rorie



Trish



Mina



Gigi



이런 방위의 개념은 “군벌정치”의 문을 열게 됨. 2009년 11월 23일, 한 정치 군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필리핀 Maguindanao 학살에서 5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21명이 여성이었음. 경찰 조사 결과, 살해된 여성 21명 중 5명의 몸에서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들이 강간당했음이 밝혀짐. 해당 여성 5명의 몸에는 멍이나 성기에 상처가 발견되었음.

기존 방위 개념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시사점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남성 폭력에 맞서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무기 판매 증가로 이어짐.
- 이런 전통적인 방위 개념(남성적이며 가부장제를 강화하는)은 과도한 세계 군비지출로 이어져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기초생활보장, 교육 등 정부의 기본적 사회 서비스 제공 역량에 영향을 끼쳤음. 이는 더 나아가 젠더 평등의 기회까지 감소시킴.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 여성 평화활동가들은 항상 인간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보다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지배적 안보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해 왔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폭력의 제도화와 미화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 왔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또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을 방지하는 국제조약 체결과 국가 입법운동에 앞장서왔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평화 교육에도 앞장서서 미래세대들에게 전쟁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국제적, 국내적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적인 해결방법이 존재함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의 이니셔티브

- 여성은 무기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폭력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무력분쟁이 종종 빈곤과 불의로 인해 일어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비를 삭감해 이를 인간개발에 사용하라는 요구에도 앞장서고 있음.



Source: bodybagcatholic.com

군사주의와 전쟁수해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공동체 내에서 분쟁 예방 및 중재 활동을 수행할뿐 아니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왔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해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또 여성은 군사주의(남성이 주요한 행위자이자 피해자인)에 저항하는 데 있어 남성의 역할을 이해하며 여성만의 활동을 넘어서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음.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 여성은 무기가 안보를 지킨다는 전쟁수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 같은 활동에 나서왔음. 여성에게 안보는 사람들이 분쟁을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정부가 사람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에 달려있는 것임.



군사주의와 전쟁수혜활동에 도전하기: 여성 이니셔티브

여성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인간안보를 위한 활동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속해 나갈 것임.



주제 토론 3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저항하라

선적을멈춰라 캠페인으로 본 국제연대의 방안

새라 쉐하비 / 바레인워치

바레인워치 – 주요 사안별 성과



프로젝트 1: 무기 및 최루탄 남용 -선적을 멈춰라(Stop The Shipment) 캠페인



KINGDOM OF BAHRAIN
MINISTRY OF THE INTERIOR
Purchasing Directorate



مملكة البحرين
وزارة الداخلية
إدارة المشتريات

Ref: PD/RFQ-011/06-13
Date: 16th June 2013.

Subject: Request For Proposal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Interior, the Purchasing Directorate is hereby pleased to invite you to submit your proposal for the following Tear Gas Cartridges and Sound Grenades:

No.	Description	Qty.
1.	CS Tear Gas Long Range Shell 37/40 mm	400,000
2.	CS Tear Gas Short Range Shell 37/40 mm	400,000
3.	CS Tear Gas Shell, Multiple Submunition (5Way) 37/40 mm	400,000
4.	Sound & Flash Grenade, 1 Bang	60,000
5.	Sound & Flash Grenade, 2 Bang	50,000
6.	Sound & Flash Grenade, 6-9 Bang	35,000
7.	CS Hand Grenades (One way)	45,000
8.	Tear Gas Hand Grenades (Five way)	45,000

ty

Home World Companies Markets Global Economy
Africa Asia-Pacific Europe Latin America Middle East & North Africa UK US & C

October 21, 2013 8:4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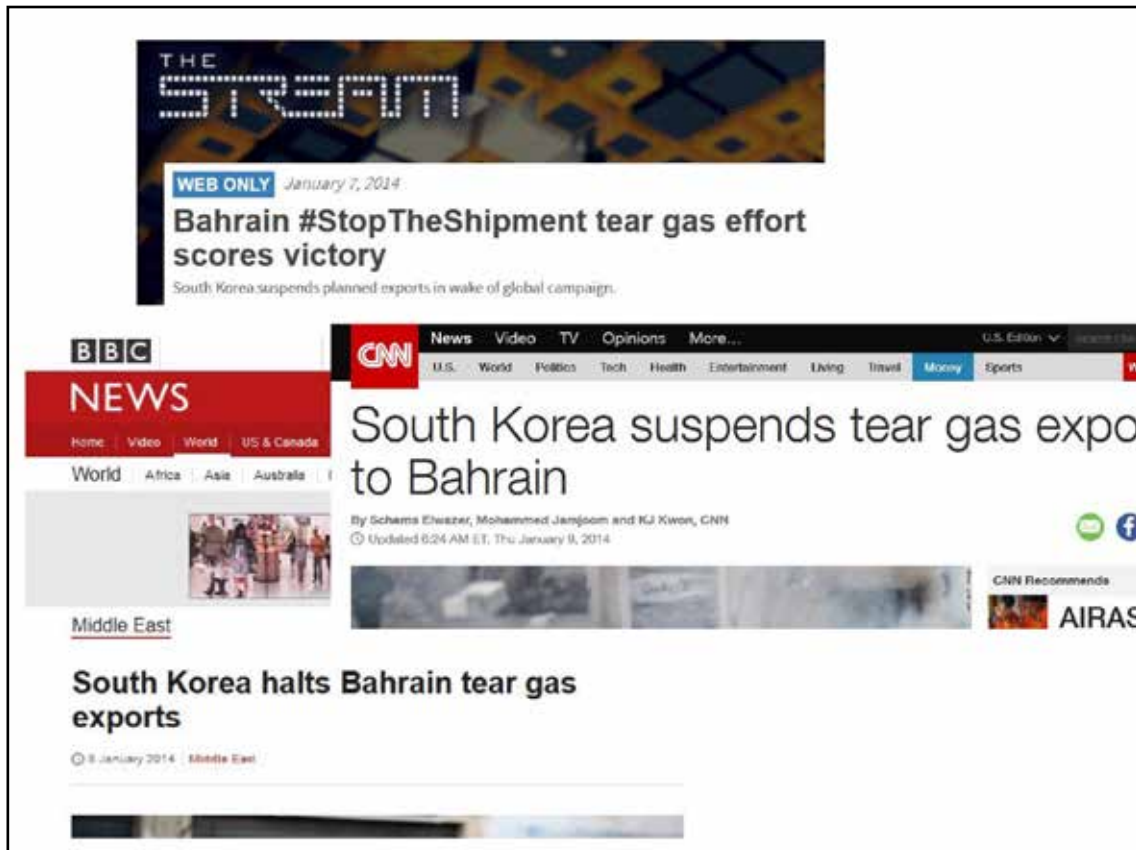
Bahrain boosts supplies of tear gas as instability continues

By Simeon Kerr in Dubai and Simon Mundy in Seoul

Share Author alerts Print Clip

Bahrain is seeking large quantities of tear gas as it attempts to subdue daily





프로젝트 2: 감청 기술 감시활동

- 디지털 보장 전문가 빌 마크작 주도의 조사활동
- 바레인정부 감마 인터내셔널 사의 핀피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사용 관련 활동
- 한국 정부 해킹팀 프로그램 사용 관련 활동

BloombergBusiness  News Markets Insights Video

Cyber Attacks on Activists Traced to FinFisher Spyware of Gamma

By Venson Silver

July 25, 2012 — 5:08 AM PDT   



The Fight to Uncover Spyware Exports to Repressive Regimes

May 13, 2014 // 01:00 PM EST



written by
THOMAS BREW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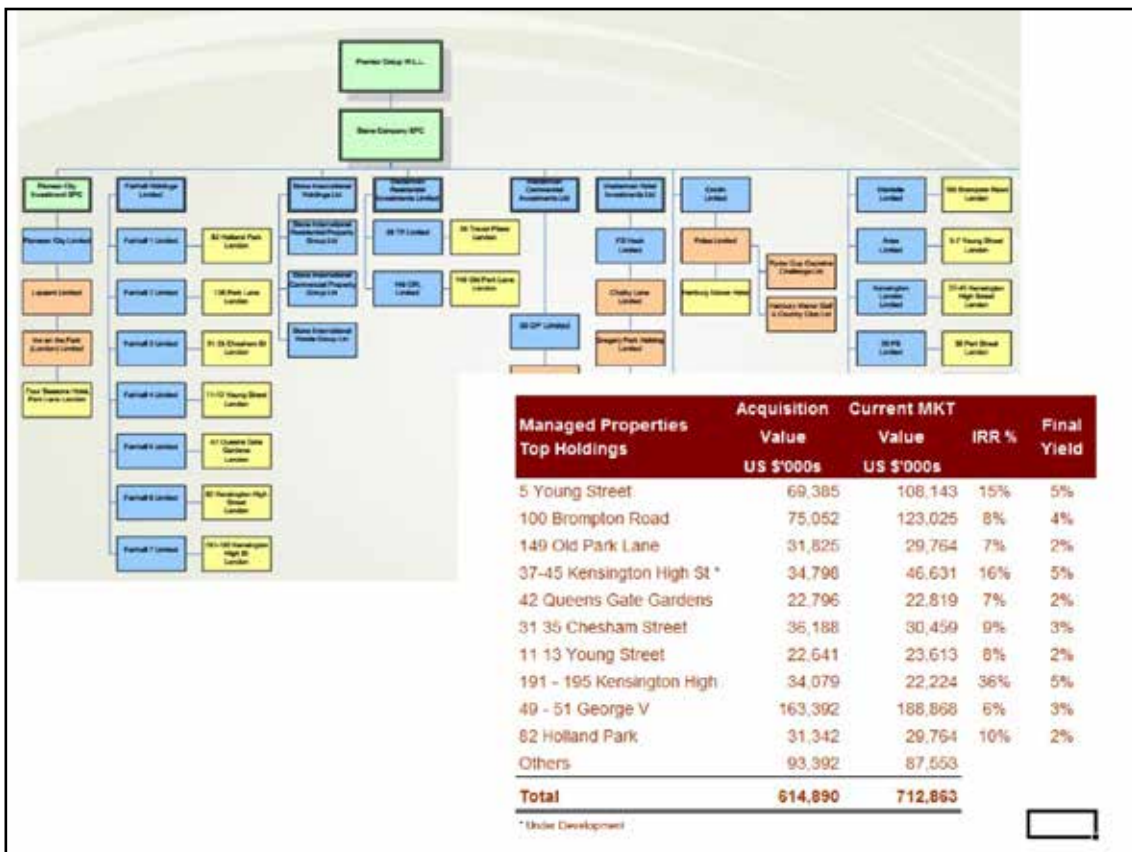
CNN Money Business Markets Tech Personal Finance Small Business Luxury     

The Cybercrime Economy

Is the government spying on you? Find out

프로젝트 3: 부패 감시 - 자금흐름 추적

- 왕족 자산, 역외 계좌에 대한 대대적 조사, 토지반환 프로젝트



December 10, 2014 6:55 pm

Bahrain land deals highlight alchemy of making money from sand

Cynthia O'Murchu in London and Simeon Kerr in Dubai

Share
Author alerts
Print
Clip

Gulf

Home
World
Companies
Markets
Global Economy
Lex

Africa
Asia-Pacific
Europe
Latin America
Middle East & North Africa
UK
US & Canada

December 10, 2014 6:54 pm

Disputed land development boosts wealth of Bahrain royals

By Cynthia O'Murchu in London and Simeon Kerr in Dubai

Share
Author alerts
Print
Clip

Comments

